

‘컨트롤타워’ 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가 위원장 임명

7월 출범 자치경찰제 구성·운영 어떻게
주민생활·교통·경비·수사 업무
신분 국가직...재정 국가지원 의무화
3년 임기 위원 7명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서 징계 요구 등 막강 권한
정치적 입김·자치단체 견제 약화 논란
국가·자치 분류 애매...초기 혼선 우려

시·도지사는 일부 인사권 외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 지명권 및 위원장·상임위원 포함 위원 임명권, 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권, 사무기구 조직권, 회의 안건 제안권, 재의요구권, 개최 요구권,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수립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컨트롤타워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정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자치경찰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사무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 임무를, 국가수사본부 수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경찰의 사무를 크게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 등 3가지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지휘 체계가 현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장 받게 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 5년 이상 ▲변호사·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등(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했다. 결격사유는 당적 및 선출직 3년, 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3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퇴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등이다.

◇시·도 자치경찰 어떻게 구성·운영되나=자치경찰은 새로운 사무실이 아닌 현 경찰서내에서 부서 조정 등을 통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주민 생활 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수사 등으로 구분된다. 주민생활 안전은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취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일상생활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정치적 입김·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지적=사실상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결국 자치경찰 구성 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에서 비리 수사 등이 제외되긴 하지만, 국가직 경찰 조직 일부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비리 감시’ 기능 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준비해 온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지역교통 분야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이다. 지역경비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다.

자치경찰의 신분 이 그대로 국가직으로 유지된 점도 이 같은 우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와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양 조직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자치단체의 기피업무로 분류된 방역단속이나 노숙인·주취자 대응 등의 업무 책임 범위를 놓고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등의 처리를 맡는다.

광주시는 이 같은 각종 우려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구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2월말까지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자치·수사 등 분류 어려움...초기 혼선 우려도=자치 경찰의 업무가 국가·수사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시급히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의 경우 경정(5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제한된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게 돼 시·도 경찰청내 결재권, 인사권 등이 분리될 수 밖에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엄중...1분기까지 일자리 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번복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픈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민간·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각종 지원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데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고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첫 발...광주·전남북 상생정신도 살아날까

24일 국회서 용역 착수보고회
호남 미래 먹거리 재생에너지 육성
민주당 지도부, 시·도지사 참석

광주·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호남 정치권의 상생’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과 전북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호남의 합’도 약해질 우려를 낳았다. 특히 과거 일부 정치권의 광주·전남과 전북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탓에 호남권 상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RE300)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에는 이낙연 당 대표, 김태연 원내대표, 홍기표 민주당연구원(정책위의장), 우원식 국

균형발전특위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김성한 그린뉴딜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민주당 민주당원은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RE300 구축’ 사전용역 일괄 사업자를 모집했고, 이날 보고회에서는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본 구상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용역은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와 환경이 우월한 호남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호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19년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7.8%에 달한다. 이 사업은 호남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남은 부분을 다

른 지역에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지역 내 총 전력 소비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50년까지 200%를 추가 생산해 타 지역에 송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소득을 보장해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과 호남 3개 지자체 등이 공동의 미래발전 전략을 위해 공동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초광역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용역 사업비 1억9000만원도 민주당원과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전북도당, 광주·전남·전북도 분담했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북이 하나로 뭉쳐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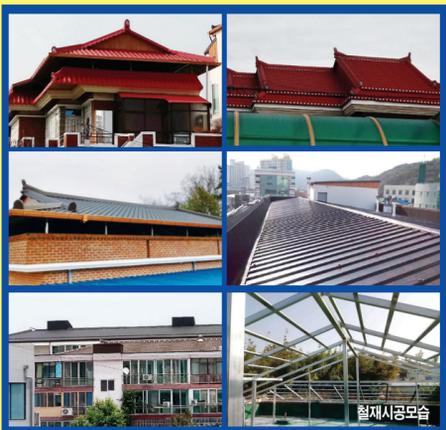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